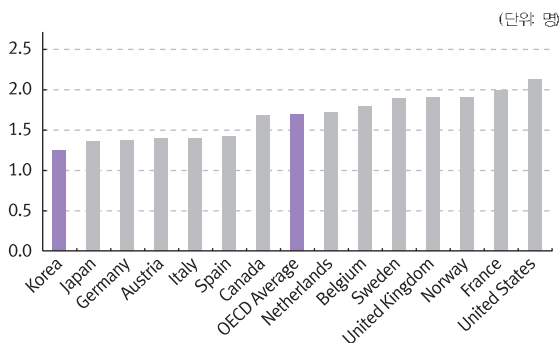


성평등한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는데...

■ 우리사회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반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꼴찌



〈그림1〉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 현황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회에서 낮아졌던 출산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연구결과 발표됨(Myrskyla, Kohler & Billari, 2009, *nature*, vol. 460)
-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능하는 척도로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여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등이 있음
- 2008년 UNDP에서 발표한 HDI, GDI, GEM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관련 지수 참여국인 108개국 가운데

- ◎ HDI 22위
- ◎ GDI 23위
- ◎ GEM 65위

→ 그런데 참여국 108개국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사회는 TFR 1.1(2006년 집계)로 108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임

- HDI, GEM 등 관련지수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 출산율 제고의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 삶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의 출산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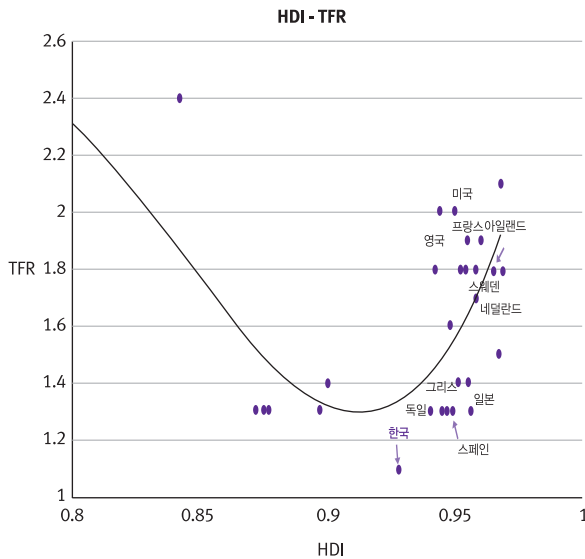
▣ 한 국가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합계출산율도 높아짐.

- OECD 국가들은 HDI가 0.8이상인 상위 랭크 국가들임
- HDI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상대적 고출산 국가
- HDI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등 상대적 저출산 국가
- OECD 국가중 각종 사회지표와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예외적 경향을 보이는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로 이들 국가는 출산율 수준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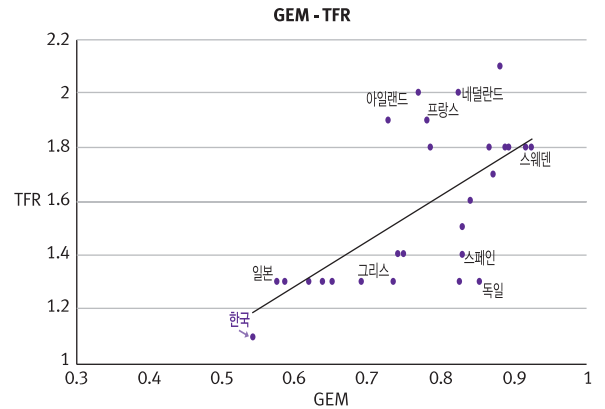
• 인간개발지수(HDI)는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한 국가지수

- 1) 장수: 평균수명으로 측정
- 2) 교육수준: 성인 문자 해독률 및 초, 중, 고 및 전문 대학 포함 대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 대한 총취학률의 합계로 측정
- 3) 생활수준: 1인당 실질 GDP(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

〈그림2〉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의 관계



〈그림3〉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과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의 관계



■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으면서
여성의 권한은 낮은 사회에서의
출산율은?

■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이 높은
사회에서의 출산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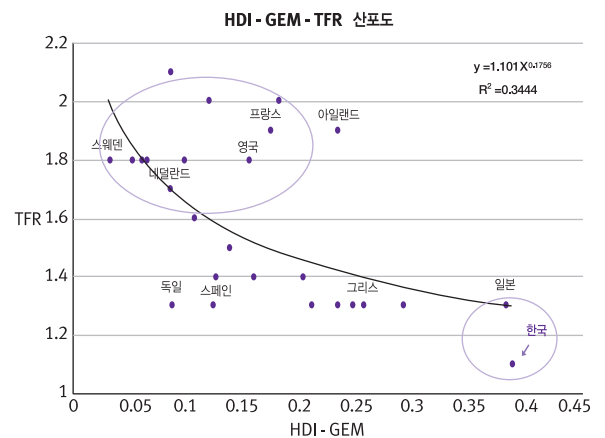
☞ 한 국가의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합계출산율도
높아짐.

- GEM이 높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상대적 고출산 국가
- GEM이 낮은 한국, 일본,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그리스 등 상대적 저출산 국가

☞ 인간개발지수(HDI)와 여성권한척도(GEM)
사이의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즉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정도는 높으면서 양성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기형적으로 낮게 나타남(한국과 일본이 이에
해당).

- HDI도 높고 GEM도 높은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 HDI는 높으면서 GEM은 낮은 한국, 일본 등이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현상 지속

〈그림4〉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의
격차와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의 관계



• 여성권한척도(GEM)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양성평등
측정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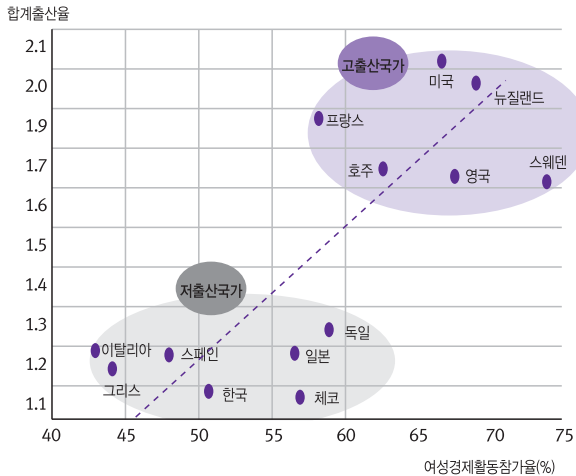
- 1)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 여성과 남성의 행정·관리
직 비율 및 전문기술직 비율로 측정
- 2) 정치적 참여와 결정권: 여성과 남성 국회의원
비율로 측정
- 3) 경제 자원에 대한 지배력: 남녀 소득비율로 측정

■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은 어떤 관계인가?

- 〈그림5〉에 따르면,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정(+)의 관계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출산율도 높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출산율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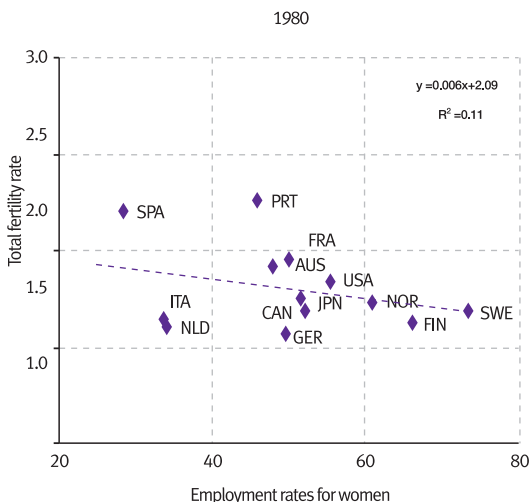
〈그림5〉 OECD 주요국의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의 관계

-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도 30년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이와 같지는 않았음.



〈그림6〉 1980년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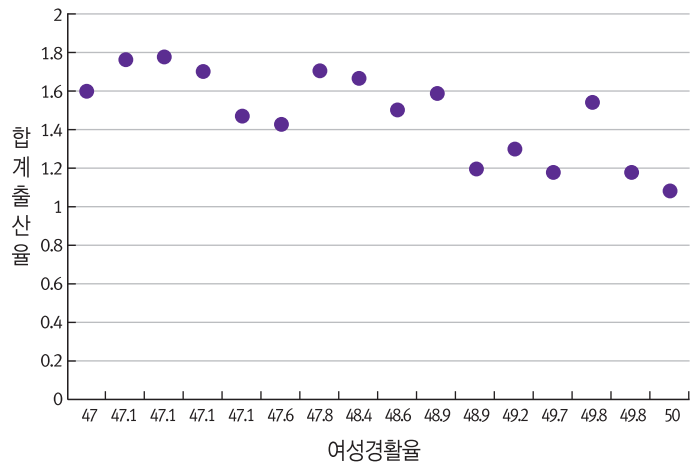
- * 출처: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어떠한가?

-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이는 1980년 OECD 국가들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관계와 유사하며 현재 우리사회는 이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7〉 한국의 1980년~2005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 일-가족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출산율과 여성취업을 제고의 해법!

- OECD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저출산 현상의 타개와 국민소득 3만불 사회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됨.
- 바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정착 및 강화가 그 해법임.

양성평등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Ⅱ) “저출산 관련 인구교육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문제 관련 국민여론 조사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정책 현안 및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2차 조사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1) 전 국민 대상 인구교육 실시에 대한 찬반 및 그 이유, 2)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은 만19세부터 49세까지의 전국 대표성 있는 성인 표본으로 여성 500명, 남성 500명, 총 1,000명임.
-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음.

이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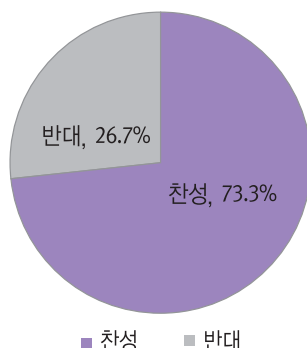
전 국민 대상 인구교육 필요한가?

■ 국민들 73%, 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교육 필요하다

인구교육 찬성율 73.3%, 성별 차이는 없어

- 우리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인구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됨. 이에 본원에서는 인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73.3%가 인구교육에 찬성한다고 밝혀 찬성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그림1). 성별 찬성 비율은 남성이

〈그림1〉 인구교육에 대한 찬반 비율



75.4%, 여성이 71.2%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표1).

〈표1〉 인구교육에 대한 성별 찬반 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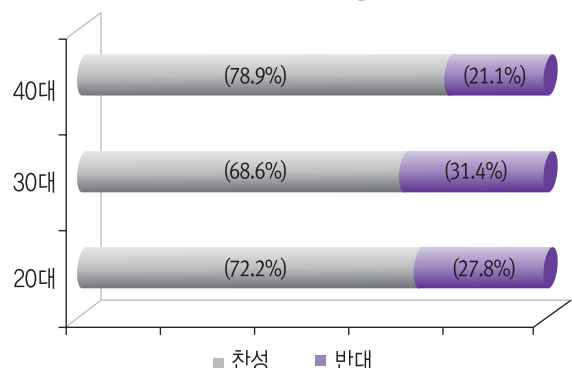
	찬성	반대	합계
남성	377(75.4%)	123(24.6%)	500(100.0%)
여성	356(71.2%)	144(28.8%)	500(100.0%)
전체	733(73.3%)	267(26.7%)	1000(100.0%)

$\chi^2 = 2.253$ d.f. = 1 Fisher's test =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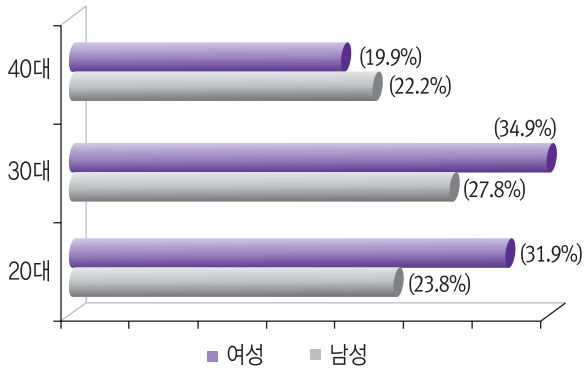
남녀 모두 40대의 찬성율이 가장 높아

- 인구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추가분석한 결과(그림2), 전체적으로 30대의 찬성율이 가장 낮고(68.6%), 20대가 그보다 약간 높은 반면(72.2%), 40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임(78.9%).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p < .01$).
- 또한 이를 성별로 재분석한 결과(그림3), 남성들은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p < .01$).
- 20·30대 여성들의 경우, 인구교육에 반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선 반면에 40대 여성의 반대율은 19.9%로 나타나 두 집단 간 10%p 이상의 차이를 보임
- 30대, 20대, 40대 순으로 인구교육에 반대하는 경향은 성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따라서 인구교육에 대한 찬반 경향이 세대별, 성별로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2〉 인구교육에 대한 연령별 찬반 비율



〈그림3〉 인구교육에 대한 연령별·성별 반대율



〈표2〉 결혼 상태에 따른 인구교육 찬반 비율

		단위: 명(%)		
		찬성	반대	전체
남성	미혼	192(75.0%)	64(25.0%)	256(100.0%)
	기혼	175(75.4%)	57(24.6%)	232(100.0%)
	전체	367(75.2%)	121(24.8%)	488(100.0%)
	$\chi^2 = .012$ d.f. = 1 Fisher's test = .917			
여성	미혼	144(64.9%)	78(35.1%)	222(100.0%)
	기혼	193(76.6%)	59(23.4%)	252(100.0%)
	전체	337(71.1%)	137(28.9%)	474(100.0%)
	$\chi^2 = 78.93$ d.f. = 1 Fisher's test =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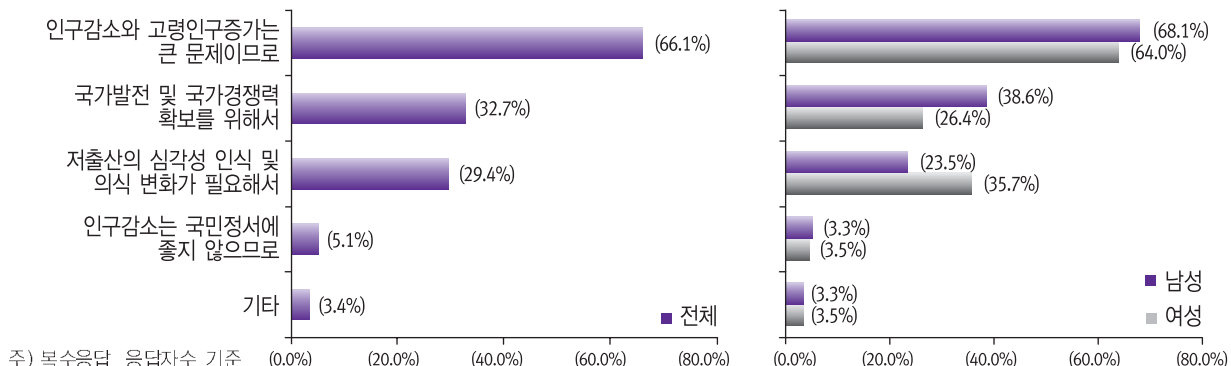
-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상태에 따라서 인구교육에 대한 찬반 경향이 뚜렷하게 나누었음($p < .01$). 인구교육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율은 76.6%인 반면 미혼여성들은 64.9%로 나타나 약12%p의 차이를 보임
- 향후 출산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들이 기혼 여성에 비해 인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상태에 따른 인구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인구교육 찬성이유,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

- 인구교육 찬성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1%가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교육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대체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찬성 비율로서 인구교육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 개진이 없었음.
- 그 다음으로 32.7%의 응답자는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이들은 인구가 경제 유지의 기본 요소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 및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응답함.
- 비슷한 수준으로 29.4%의 응답자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해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성별 분석 결과,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35.7%)이 남성(23.5%)보다 12%p 이상 더 높음. 반면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남성(38.6%)이 여성(26.4%)들보다 12%p 정도 높았음.
- 한편, 5.1%의 응답자는 ‘인구감소가 국민정서에 좋지 않다’고 응답함. 이들은 인구가 감소되면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며, 학자족 사회에서 형제가 없이 자라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함.
-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이유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 정도로 추측됨.

〈그림4〉 인구교육 찬성 이유



주) 복수응답, 응답자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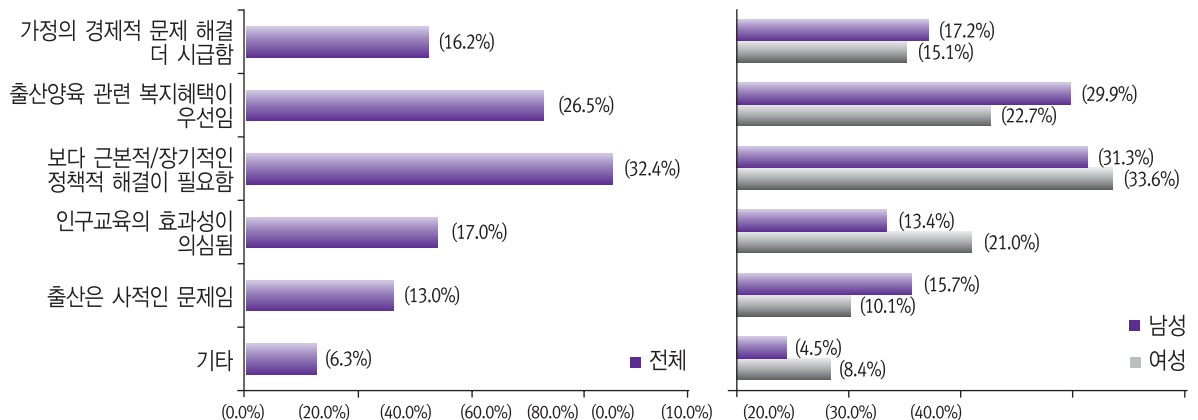
▣ 인구교육 반대이유, '인구교육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

- 인구교육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출산·양육 관련 복지혜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26.5%)인 것으로 나타남.
 - 반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인구교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은 있으나 그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인구교육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실제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출산 관련 정책을 늘리기 보다는 생활환경의 변화 및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좀 더 구체적인 견해로, 출산·양육 관련 복지혜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탁아시설 확장이나 양육비 지급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성별에 따른 응답경향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순위상으로는 1위, 2위가 동일하나 응답률 상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음.
 - '출산·양육 관련 복지혜택이 우선'이라는 항목에서 여성(29.9%)이 남성(22.7%)보다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출산 및 양육 관련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17.0%의 응답자가 '인구교육의 효과성이 의심된다'고 답함. 이들은 인구교육이 강제로 이행되지 않는 이상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사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함.
 - 남성(21.0%)과 여성(13.4%)의 응답률의 차가 7.6%p 정도로 나타나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인구교육의 효과성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또한 16.2%의 응답자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인구교육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그보다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출산·양육 관련 복지혜택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와 같은 응답은 인구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보다 사회 구조적인 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출산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0%를 차지하였으며, 이 같은 의견은 여성(15.7%)이 남성(10.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인구가 아직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몰라서' 등 저출산의 심각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도 있었으며, '식상한 정책이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그림5〉 인구교육 반대 이유



주) 복수응답, 응답자수 기준

이슈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 해소 위해 '교육정책 개선'이 가장 필요해 '출산 관련 복지혜택'과 '보육비·양육비 지원'도 이에 못지않은 주요 대처 방안

저출산 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노력 1·2·3위

-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1·2·3순위의 형태로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1·2·3순위 모두에서 '교육정책의 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이 거론됨(그림6).
-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1순위에는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23.6%)', '교육정책의 개선(19.7%)',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16.9%)'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순위는 '교육정책의 개선(20.1%)',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16.6%)',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13.9%)'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음
- 3순위도 '교육정책의 개선(19.6%)',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17.2%)',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13.0%)' 순서로 나타나 2순위와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는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약 13%p 감소한 응답률을 보임
- 이는 출산 관련 복지정책이 우선적인 정책 사항이기는 하나, 2순위와 3순위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일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님을 보여줌.

- 반면, '교육정책의 개선'은 1·2·3 순위에서 20% 인덱스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일관성있게 보이고 있음.
-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 또한 모든 순위에서 17% 인덱스의 일관성 있는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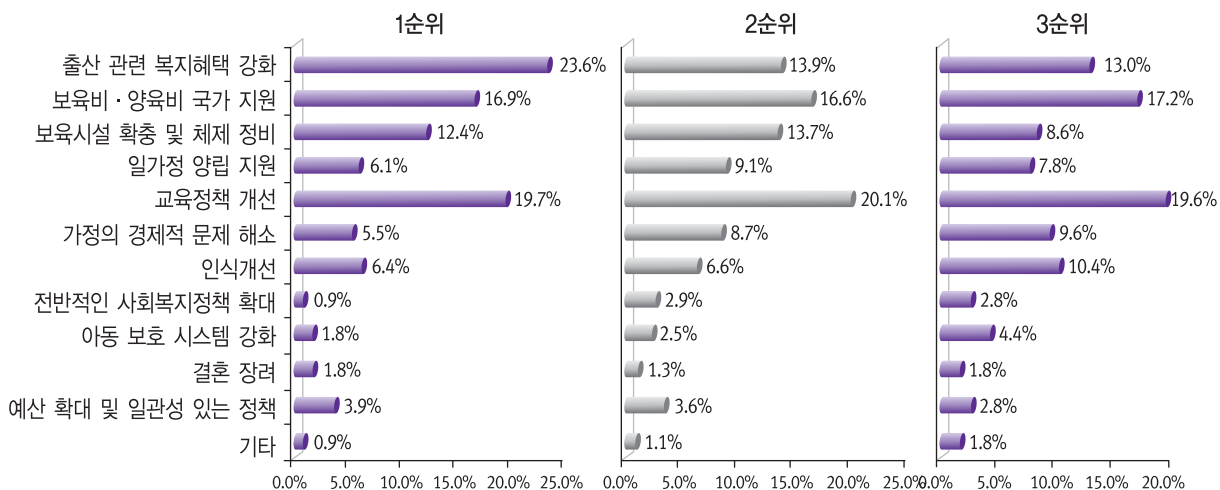
복수응답 결과,

저출산 해소 방안 1위는 '교육정책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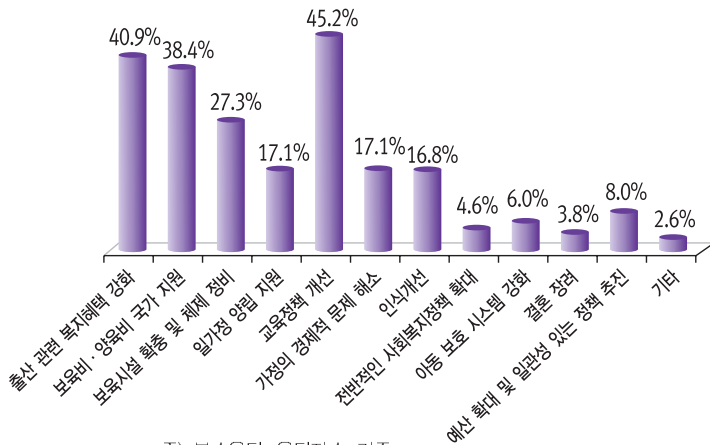
2위는 '출산 관련 복지 혜택 강화'

- 조사된 저출산 해소 방안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을 복수응답 처리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그림7, 표3).
- 복수응답 분석 결과, '교육정책의 개선'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내용은 사교육비 경감,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활성화, 교육비(학자금) 지원, 입사제도 개선 등이었음.
-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50% 인덱스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혼자들 또한 51.1%의 응답률을 보여 주로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3).
- 이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력하였던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를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6〉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1·2·3순위



〈그림 7〉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복수 응답)



주) 복수응답, 응답자수 기준

-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출산관련 복지혜택 강화(40.9%)' 인 것으로 나타남
 - 출산관련 복지혜택은 주로 20대(50.6%), 미혼자(44.5%)들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미 출산을 경험한 사람들보다는 향후 출산을 예정한 사람들이 출산관련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의 확대, 출산에 필요한 의료검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출산 관련 시설 및 복지정책 마련 등이 제기되었음
- 비슷한 비율로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38.4%)' 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특히 이 부분은 기혼자(42.1%)들이 미혼자(34.3%)들에 비해 7%p 이상 더 높게 나타나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여기에는 '보육비 무료와 같은 파격적인 지원 외에도 기자금, 분유와 같은 유아용품 저가정책도 거론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경제적 혜택이 다자녀 가구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체제 정비(27.3%)', '일·가정 양립 지원(17.1%)',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소(17.1%)',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16.8%)' 순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확충 및 체제 정비'의 응답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30.0%), 30대(32.1%), 기혼자(30.4%) 집단에서 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보육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 환경 개선 및 사회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의 보장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출산 후 고용 보장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여성(22.1%)들이 남성(12.1%)들보다 뚜렷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임
 -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소로는 주택문제 해결, 안정된 고용 보장, 세제혜택을 통한 양육학 해소 등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미미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시스템이 강화(6.0%)'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미혼자들을 중심으로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전체 3.5%, 미혼 4.7%)' 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3〉 성별·연령별·결혼경험유무에 따른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단위: 명(%)

	성별		연령			결혼상태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	205 (41.8)	197 (40.0)	161 (50.6)	132 (39.3)	109 (33.1)	209 (44.5)	193 (37.6)	402 (40.9)
보육비·양육비 국가 지원	205 (41.8)	172 (34.9)	119 (37.4)	135 (40.2)	123 (37.4)	161 (34.3)	216 (42.1)	377 (38.4)
보육시설 확충 및 체제 정비	120 (24.5)	148 (30.0)	76 (23.9)	108 (32.1)	84 (25.5)	112 (23.8)	156 (30.4)	268 (27.3)
일·가정 양립 지원	59 (12.0)	109 (22.1)	53 (16.7)	78 (23.2)	37 (11.2)	86 (18.3)	82 (16.0)	168 (17.1)
교육정책 개선	224 (45.7)	220 (44.6)	112 (35.2)	169 (50.3)	163 (49.5)	182 (38.7)	262 (51.1)	444 (45.2)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소	99 (20.2)	69 (14.0)	42 (13.2)	67 (19.9)	59 (17.9)	84 (17.9)	84 (16.4)	168 (17.1)
인식개선	83 (16.9)	82 (16.6)	61 (19.2)	38 (11.3)	66 (20.1)	79 (16.8)	86 (16.8)	165 (16.8)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 확대	16 (3.3)	29 (5.9)	7 (2.2)	19 (5.7)	19 (5.8)	10 (2.1)	35 (6.8)	45 (4.6)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18 (3.7)	41 (8.3)	14 (4.4)	26 (7.7)	19 (5.8)	27 (5.7)	32 (6.2)	59 (6.0)
결혼 장려	21 (4.3)	16 (3.2)	10 (3.1)	12 (3.6)	15 (4.6)	22 (4.7)	15 (2.9)	37 (3.8)
예산 확대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41 (8.4)	38 (7.7)	28 (8.8)	26 (7.7)	25 (7.6)	41 (8.7)	38 (7.4)	79 (8.0)
기타	12 (2.4)	14 (2.8)	7 (2.2)	4 (1.2)	15 (4.6)	11 (2.3)	15 (2.9)	26 (2.6)
합계	490	493	318	336	329	470	513	983

주1) 복수응답, 응답자수 기준

주2) 기혼에는 사별, 별거, 이혼이 포함되어 있음